

KMI

북한해양수산리뷰

2025년
3월호

발간년월 2025년 3월 31일

발행인 최상희 원장 직무대행 총괄 윤인주 감수 김민수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정다현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82-51-797-4747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동향 분석

3

트럼프 2기 해양안보 정책에 따른 한반도 해양안보 정세

임경한(해군사관학교 교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남북한 관계

최지현(제주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연구 동향

14

북한 해양수산 국내 연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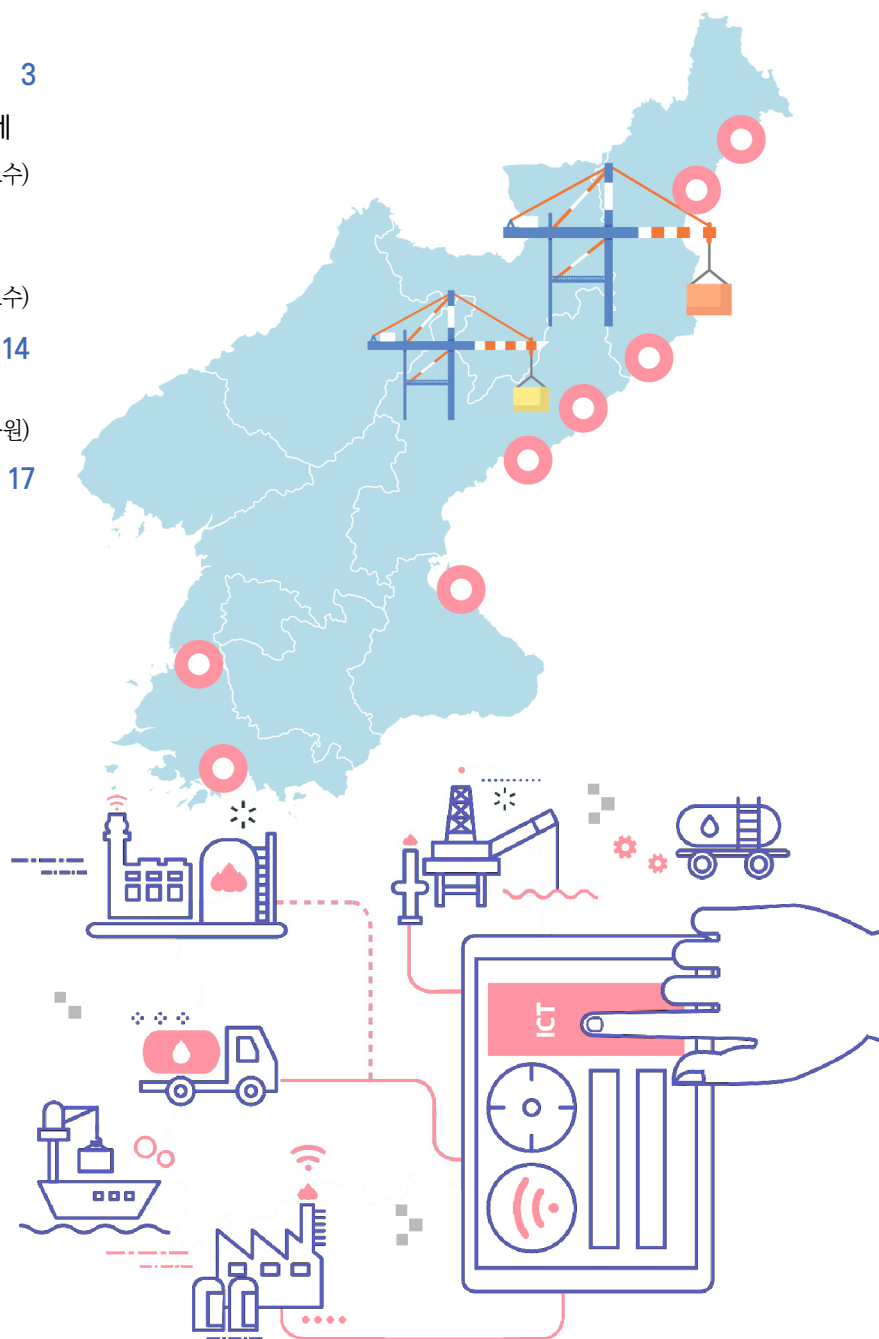
정다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북한 소식

17

북한 언론 해양·수산 기사 (2025년 1~3월)

NK News 해운·항만 기사 (2025년 1~3월)



이번 호 소개

2025년 3월호 북한해양수산리뷰는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안보 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체제 인식 전환에 주목하며, 두 건의 동향 분석, 세 건의 연구 동향, 그리고 최근 북한의 해양수산 관련 보도 소식으로 구성했다.

먼저, 트럼프 2기 출범과 한반도 해양안보 정세, 그리고 북한의 해양영토 인식 변화를 주제로 한 두 건의 동향 분석을 소개한다. 해군사관학교 임경한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양안보 정책 방향을 트럼프 1기와 비교 분석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 해군력 운용의 재편 흐름이 한반도 및 주변 해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다음으로, 제주대학교 최지현 교수는 최근 북한이 공식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 시도 및 ‘국경 조항’ 삽입 요구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한다. 북한의 해양영토 인식변화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미칠 영향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이어지는 연구 동향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사이 발표된 북한 해양수산 관련 국내 연구 세 편을 소개한다. 북한의 ▲해운·항만 정책과 법제 변화(김상훈), ▲항만을 통한 제재 이행(함상연·최석윤), 그리고 ▲북한의 해양 감시체계(김현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이들 연구는, 해양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인식과 활동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매체 및 NK News 보도 분석을 통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보도된 북한의 해양·수산·해운·항만 관련 기사를 종합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정책 추진 방향과 관심 분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해양 협력이나 갈등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3월호는 안보 환경 변화, 북한의 체제 전환 인식, 국내 연구 동향, 그리고 북한 매체 및 외신 분석을 균형 있게 담았다. 북한 해양수산에 대한 최신 흐름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동향 분석

트럼프 2기 해양안보 정책에 따른 한반도 해양안보 정세

임경한

해군사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미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위한 해양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을 가장 경쟁적인 도전국으로 간주한다. 미국 해군은 급격한 전력 증강을 실현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하 중국 해군)의 공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태평양(Indo-Pacific)을 배경으로 중국이 미국의 해양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미국 해군이 대응해야 하는 당연한 현실이다. 중국발 위협의 시작과 해법이 모두 인도-태평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은 동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사실상 인도-태평양이 미국 안보전략의 최전선이며, 미국 해군력의 전략적 운용이 총망라되는 핵심 전장인 셈이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었고,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성은 국제 안보질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부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작했고, 동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안보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인도-태평양을 배경으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GDP의 62%, 무역의 46%, 그리고 해상 운송의 절반을 차지한다.¹⁾ 따라서 원활한 교역을 위해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를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해양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곧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긴요한 조건이다. 특히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은 물론이며 한반도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이 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해양안보 정책을 확인 및 전망하고, 한반도 해양안보에 필요한 함의를 간략히 모색하고자 한다.

동향 분석

2. 트럼프 1기 & 2기 행정부 해양안보 정책

1) 트럼프 1기 해양안보 정책 평가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묶어 미국의 힘과 영향력, 그리고 국가이익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명시했다. 특히 중국을 국제 질서에 반하는 수정주의 세력이자,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쟁자(rival)로 언급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적인 침해에 대한 전 방위적인 대응으로 대(對)중국 압박을 진행했으며, 무역분쟁을 통해 세계적 공장이자 시장의 역할을 하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훼손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경제외교에 초점을 맞춘 안보정책에 집중하면서 해군력 중심의 군사적 수단을 적극 활용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담은 다양한 하위 전략서를 발표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중국이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면서 공중, 지상, 해양,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 전반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2018 NDS(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기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동맹 및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미군의 글로벌 주둔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 등을 공개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중국이 해양력을 강화하여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활동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에 미국이 큰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한 점이다. 2019년에 발표된 국방부와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고려했다. 미국은 “현존 질서를 파괴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향후 공세적으로 전략적 경쟁에 나설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²⁾

후속 조치로서, 2018년 5월 미 국방부는 전 세계적으로 작전하는 미군 중 그 규모와 책임구역이 가장 방대한 태평양사령부(Pacific command)를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ific command)로 변경하고 인도-태평양의 자유롭고 열린 공간 조성을 향한 전략적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곧 글로벌 안보와 관련한 핵심 주도

동향 분석

권을 갖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가장 주요한 위협이 될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마무리되기 전 2020년 12월, 미국 해군은 해병대 및 해안경비대(해경)와 함께 ‘해양에서의 우세: 전영역 통합 해군력을 통한 우위’라는 제목의 해양 전략서를 발표했다.³⁾ 압도적인 해양력을 갖춰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력 확장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트럼프 2기 해양안보 정책 전망

미국은 해군력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동맹 및 파트너와 해양안보에 관한 다방면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의 중점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비해 해양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점유하기 위한 전력 발전에 매진한다. 신형 항공모함 등 고가치 전력뿐만 아니라 무인전력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양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자체적인 해양전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해양안보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영국, 호주와 함께 3자 안보협의체인 오키우스(AUKUS), 그리고 일본, 호주, 인도 등과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등을 통한 소다자 안보협력에 주력한다.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들과 연합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주요 예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3월 기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국가적 영향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미국이 보여준 대외정책은 관세(tariff)를 포함한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미 국방 전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맹 정책 등에 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주요 인사로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마이크 월츠/’74년생), 국무장관(마르코 루비오/’71년생), 국방장관(리트 헤그세스/’80년생) 등이다. 이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면서, 미국의 국방력 강화를 바탕으로 도전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40-50대로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정치 성향은 매우 보수적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 방식을 선호한다. 특히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군의 글로벌 재배치 및 예산 삭감 조치를 강행할 뜻을 밝히

동향 분석

는 등 국방 운영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미 해군성 장관 지명자인 펠란 또한 기업인 특성에 기인하여 절대적으로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군력 운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연계하여 2기 행정부에서 보일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전망된다. 첫째,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군사·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과학기술 등 전 방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을 지속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인도-태평양에서 주요 경쟁자로 인식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고, 특히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더욱 많은 책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기조는 트럼프 1기 시기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미국의 요구 수준과 강도가 이전에 비해 또는 예상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한국에 주는 함의 및 대응 방안

오늘날 미국 해군은 언제든지 최소한 3개 이상의 항공모함 전단과 수십 척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추구하는 해군력 현시(presence)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강력한 해군력을 활용한 군사작전을 통해 인도-태평양의 자유롭고 열린 개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해군력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과 대만해협 통항작전 등을 비정기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미국 해군력의 능력과 의지를 공개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해군 단독으로 또는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해양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미국 주도의 통합역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⁴⁾

미국 해군은 적정한 전력 유지를 위해 함정의 건조 및 퇴역 주기를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천한다. 최근 미국 해군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적정 수준의 함정을 건조하는 것과 함께 노후화된 함정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 Repair, & Overhaul) 주기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해군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해군 대

동향 분석

비 우세하면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해군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차세대 항공모함 전력화가 지연되고, 최신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또한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 이는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과 함께 군함의 수리 및 건조를 위한 충분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해양 전력의 핵심인 해군함정의 척수를 비교해보면 중국 해군 대비 미국 해군이 우세한 전력을 갖추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전력 건설 차질, 해군(해병대) 핵심 운용 인력 부족에 따른 글로벌 전투태세 유지 제한 등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동맹의 힘을 이용하는 방안이 유일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해군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인도-태평양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핵심 플랫폼을 활용한 파트너십 강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군함 건조 능력을 갖추고 가동할 수 있는 조선소가 미국 내 4곳 밖에 없으며, 그나마 숙달된 기술진의 부족으로 함정 건조는 물론이며 정비를 위한 시설과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⁵⁾ 이러한 결과로 미국 해군은 현재 운용할 수 있는 함정도 부족하고, 함정에 근무할 수 있는 병력도 모자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질서의 구조적 여건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많은 경우 거래적 협력관계(transactional cooperation relationship)의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안보 정책에 국한하여 전망할 때 한·미 간 협력의 정도와 방향도 상호 거래의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차 한·미 간 협력은 물론이며, 한반도 안보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으로서 상호 해군 간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외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미국의 해양전력 구축을 위해 한·미 간 조선산업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에게 가장 시급하면서 부족한 분야는 해군함정의 정비 및 건조인데, 이를 한국이 보완해주는 것이다.

동향 분석

그 해답은 함정 MRO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국내 조선 기업이 기술의 우수성을 활용하여 미국 해군함정의 MRO 지원을 통해 신뢰를 쌓아 미국 해군함정의 성능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신형 함정 건조 자격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한·미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 MRO 등 조선업에 관한 협력은 국가적 차원의 협상 아이টে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이 이슈만을 가지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생각보다는 국가 수준의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좋은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림 1>은 2024년 미국 해군 주요 직위자가 한국 조선 기업을 방문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1> 미국 해군 주요 인사의 한국 조선소 방문

해군성 장관 HD현대중공업 방문('24.2월)	인태사령관 한화오션 방문('24.10월)
	

출처 : HD현대중공업 & 한화오션 홈페이지.

미국은 최근 해군 전력의 MRO 및 함정 건조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게 이와 관련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2024년 12월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 발의, 2025년 1월 ‘해군 2025 함정건조계획 분석보고서(An Analysis of the Navy’s 2025 Shipbuilding Plan)’ 공개, 2025년 2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The Ensuring Naval Readiness Act)’ 및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The Ensuring Coast Guard Readiness Act)’ 발의 등 미국의 조선업 재건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이는 곧 중국 해군의 팽창을 견제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동향 분석

미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해양안보와 관련한 산업 전반에서 한국에게 분명한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한국은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해양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미 해군 간 주요 플랫폼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해양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한·미 간 해군력 증강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국 해군에게 가장 시급하면서 부족한 분야인 해군함정 MRO 협력 체계에서부터 가까운 미래에 미국 해군함정 건조까지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 정책의 변화에 맞춰 우리에게 필요한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이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의 확장을 주도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감대를 국내·외에서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⁶⁾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인도-태평양의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대한민국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서울: 대한민국정부, 2022.
- 2)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Washington, D.C.: DOD, 2019); U.S.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Washington, D.C.: DOS, 2019.
- 3) U.S. Secretary of the Navy. 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 Washington, D.C.: Secretary of the Navy, 2020.
- 4)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5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5.
- 5) Sadler Brent. "Is the U.S. Navy Fit for Purpose?," Commentary Defense, November 28, 2023, <https://www.heritage.org/defense/commentary/the-us-navy-fit-purpose>(검색일: 2025.03.10.).
- 6) 임경한. "2025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정세 전망 : 미국". KIMS Periscope. 372호(2025.02.21.).

동향 분석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남북한 관계

최지현

제주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은 2023년 12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제기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한이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남북 관계에 관한 입장을 북한이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법상 완벽한 두 국가 간의 관계로 비정(比定)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헌법 개정과 노동 당규약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민족, 통일, 화해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와 ‘국경 조항’을 삽입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하였다.¹⁾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삭제되었는지는 지금까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²⁾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오히려 대대적인 헌법 개정은 없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존의 남북관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지만, 제4조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다.³⁾ 그리고 남북 사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남과 북이 합의한 중요한 기본 문서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관계를 통일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며, 서로의 국가성을 부정한다.

동향 분석

이후 한국은 남북 사이의 합의를 조약과 비견되는 ‘남북합의서’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⁴⁾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체결하고 비준하되(법 제21조 제1항), 국무회의의 심의(법 제21조 제2항)를 거치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혹은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법 제21조 제3항)을 갖는다.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과 남북 관계

북한의 두 국가론이 확정될 경우 한국 내부의 법적 규율과 상당한 충돌이 발생한다. 우선 북한과 한국 사이에는 체결되는 남북합의서의 성격이 애매 모호해진다. 이것을 북한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비정(比定)하는 조약으로 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조약으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아직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불가능하지만, 평화체제가 안착 된다는 전제에서 북한은 외교관계 수립과 대사관 설치를 요구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로서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제한 때문에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 설치, 혹은 대표부 설치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평화 시를 상정한 판단일 뿐이다. 두 국가론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은 평화 시를 상정한 것이 아니다. 남북 관계가 전쟁 중임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2023년 12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사이가 아직 전쟁 상태가 종결되지 않은 “전쟁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은 이러한 ‘전쟁 중이라는 전제’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와 ‘국경 조항’

우선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와 ‘국경 조항’에 대한 삽입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에 주목하면 두 국가는 현재 교전 상태에 있고, 전시(戰時)이므로 언제든지 전쟁이 개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남북 사이에 1953년 정전협정 체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동향 분석

또한 언제든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전쟁이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군사적 위협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음의 ‘국경 조항’에 관한 문제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023년 12월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남북한이 교전 국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남쪽의 국경선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남쪽 지역 전체를 평정’하겠다는 위협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1953년 정전협정 상의 군사분계선을 준수하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다. 다만 두 국가론에 따른 경우, 단순한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국제법상 두 국가 사이 영토를 나누는 국경선이라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 주장 및 ‘국경 조항’에 대한 주장 이면에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으로의 요구 및 북미 교섭을 통한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의 요구가 들어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적대적 두 국가론과 북방한계선

문제는 해상 경계선이다. 정전협정은 육상의 경계 획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조 제2항). 해상의 경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53. 7. 27) 이후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W. 클라크 중장이 선포한 북방한계선이 그 모태이다. 정전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북한은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1999년 9월에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 섬으로 향하는 좁은 수로를 통하여 한국 선박이 통항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다.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새롭게 해상경비계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여 우발적 군사충돌을 피하고, 어로활동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울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최초로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이후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및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다시 한번 서해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남북한이 확인하였다.⁵⁾

하지만 최근 남북한 사이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고, 2023년 11월 21일 북한의 우주 위성 발사에 대해서 한국이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 효력

동향 분석

정지를 선언하자, 북한은 11월 23일 한국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켰다.⁶⁾ 이렇게 남북 사이 ‘서해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확인하였던 9·19 군사합의 효력의 완전 정지를 북한이 주장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 위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경선을 포함한 헌법 개정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국가”, 즉 “남한과 분리된 별개의 완벽한 하나의 국가” 주장 속에 북한의 영토와 영해의 지위,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남측의 해상 국경선으로 북방 한계선을 받아들일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가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영토 조항을 새롭게 개정한 헌법상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헌법 개정 요구 이전까지 상황 및 그 이후 남북 간 대결 관계를 고려해 보면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에 우호적인 규정은 아닐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헌법 개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선부른 단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북한이 향후 두 국가론 주장을 변경하지 않고 결국 헌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최고 규범으로 확정한다면, 과거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한 해상 평화체제 수립 시도 경험과는 달리 남북한 간의 해상 평화체제 수립 및 불가침 체제 확보 협상은 더욱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김태우, “자충수가 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자유아시아방송, 2024.12.04.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ae40d0dcc6b0-ce7cb7fc/theory-two-hostile-nations-12042024093227.html> (25년 3월 28일 검색)
- 2) “북, 헌법 개정…김정은 제안한 ‘통일 삭제’ 언급 없어” 한겨레신문 2024.10.0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1676.html> (25년 3월 28일 검색); “김일성·김정일 부정하는 김정은 ‘두 국가론’…북한 헌법 개정 될까”, 주간경향 1599호 2024. 10.21.일.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10140600051&dept=113 (25년 3월 28일 검색)
- 3) 대법원 1990. 9. 25. 90도1451, 대법원 1996. 11. 12. 96누1221, 대법원 1999. 10. 8. 99도2437, 대법원 1999. 12. 28. 99도4027.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 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 5)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2018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8 군사분야 합의서).
- 6) “북한, 9·19 군사합의 효력 완전히 무력화” BBC NEWS 코리아. 2023.11.23.,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1pky3ewlgo> (25년 3월 20일 검색)

연구 동향

북한 해양수산 국내 연구 소개

정다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안보 자산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북한 해양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사이 발표된 국내 북한 연구 가운데, ▲해운·항만 정책과 법제 변화, ▲항만을 통한 제재 이행, 그리고 ▲북한의 해양 감시체계에 주목한 세 편의 주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활동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북한의 해운·항만 정책 및 법제 연구 - 시기별 변화 양상과 성과 및 한계¹⁾

본 논문은 북한의 해운·항만 분야에 대한 정책 및 법제 변화 양상을 지도자 별 시기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다. 시기별 해운·항만 정책이 대외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변화해왔는지를 법령 제정·개정 흐름을 중심으로 추적하고 있다.

북한의 해운·항만 여건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동·서 해안 간 연계가 어려운 지형, 노후한 선박, 하역능력이 낮은 항만 인프라가 주요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체제 수립 초기부터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법제를 마련해왔으며,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법령 제정 및 개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일성 주석 집권 시기에는 사회주의권 무역 확산에 따라 해운법(1980), 항만법(1986) 등이 제정되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는 국제규범 수용을 강화하면서 선원법, 배안전법, 수로법 등 관련 법령의 기반을 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이 법령들을 체계화하고 대외무역 확대를 염두에 둔 조항(예: 국제협약 우선 적용, 외국 선박 대리업무 법제화

연구 동향

등)을 다수 포함시켰다. 흥미로운 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무역 지배용선중개법’, ‘해난사고처리법’ 등 신규 법령이 다수 제정되었고, 항만 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선진과학기술 도입’, ‘안전보장체계 구축’, ‘환경 보호 강화’ 등의 조항이 신설되는 등 현대적 해운 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해운·항만 정책 변화가 단순히 인프라나 경제 여건의 반영이 아니라, 시기별 외교전략, 대외개방 기초, 국제규범 수용 의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 UN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에 관한 연구²⁾

본 연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중 해양에서의 제재 항목 이행과 항만 관계부서 간 협력 방안을 심층 분석한 연구로, 북한 선박의 환적 활동 및 석유·수산물 밀수에 대응하는 항만 기반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북제재는 북한산 수산물·석탄·철의 수출 전면 금지(유엔안보리결의안 2371호), 북한 선박의 해상 환적 금지(2375호), 정유·원유 수입 상한(2397호) 등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제 대상으로 한다. 논문은 이러한 제재 이행에 있어 해군·해양경찰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세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항만 관계부서의 역할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부산항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한 ‘An Hai 6호’, 위장 선박 ‘Billions 18호’ 등의 사례를 통해 AIS 조작, 선박 식별정보 은폐, 다단계 밀수 방식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 항만 당국의 대응 한계를 지적한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유류 환적에 연루된 선박들의 행태와 소유 기업 네트워크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제시한다. ▲항만 관계부서의 대북제재 관련 정보 최신화 및 이행지침 마련·적용, ▲대북제재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운업계의 자율지침 마련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며, 유엔전문가 패널 중단 이후 더욱 철저한 국내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연구 동향

3. 상용 지구관측위성의 군사적 활용성 연구³⁾

본 연구는 상용 지구관측위성이 해양안보 측면에서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며, 특히 북한이 이를 대남 해양감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유럽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의 Sentinel-1/2 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상용위성이 군함의 항로 추적이나 해군기지 감시 등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북한이 자체 정찰위성인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표적 식별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상용 위성영상의 활용 기술을 적극 개발 중이며, 특히 고가치 해상 표적 식별 및 감시에 상용위성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우리 해군기지와 연안 작전환경이 새로운 정보전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러시아와의 전략 협력 강화가 북한의 위성 운용 및 해양 감시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해양감시 전략이 기존의 전통적 수단을 넘어서 위성 기반 정보전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해군의 작전 보안 및 정보우위 유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해양안보 및 해운·항만 관련 정책의 다면성을 조명한 국내 연구 세 편을 소개하였다. 이들 연구는 각각 제재 이행 체계, 해운 법제, 위성기술이라는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해양 활동이 교역이나 어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안보·법률·외교 전략·국제규범 수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의 해양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 문건이나 신문 기사, 통계에 기반한 분석뿐만 아니라 해상 정보 기술, 항만 운영제도, 국제법적 수용 여부 등 다양한 시각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소개한 연구들은 해양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북한의 해양인식과 해양안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김상훈,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2) 함상연·최석윤, 『해사법연구』 제36권 제2호, 2024.

3) 김현중 (대한민국 해군 소령), 『동아연구』 제44권 1호, 2025.

북한 소식
1월

북한 해양·수산 기사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1월 5일	각회도, 애도간석지 건설장에서 대발파 연이어 진행	- 황해남도 ‘각회도간석지’ 건설장에서 1월 4일, 15만산, 10만산 대 발파를 연이어 진행, 공사를 전격적으로 내밀 수 있는 확고한 전망 마련 -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건설장에서는 애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방 조제 공사를 결속, 1차 물막이 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담 보 마련
로동신문	1월 7일	방조제가 뺏어간다- 평안남도 간석지건설종합 기업소에서	- 평안남도 ‘증산간석지’ 1구역 공사는 수백만㎡의 토량을 처리, 수 십 리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고 수십만 ㎡의 장식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 완공되면 수천 정보의 새 땅을 얻게 됨. 현재 1구역 공사 완공에 매진 중
로동신문	1월 12일	조선동해에서 바다가양식업의 발전전망	- 수산연구원 원장 박사 심성보 기고 글 - 2024년 12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 “북한은 해안선이 길어 바다를 낀 시, 군이 적지 않으며 우리 바다는 깨끗하고 생태조건이 아주 좋음”, “이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해안지역에서 바다양어와 양 식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 - 2024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신포 시바다가양식사업소’에 얻은 경험을 토대로 또다시 다른 지역에 ‘바다가양식사업소’를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을 중요하게 제시 - 동해에는 바다가양식에 유리한 조건들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으 며, 특히 다시마, 미역, 전복, 해삼 등의 양식 적지가 많음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동조선만을 비롯해 여러 만이 있어 양식에 유리. 물이 맑고 물흐름이 좋으며 해저 지형이 해안 인근까지 비교적 깊어 양식장을 가까이 조성할 수 있음. 두만강 등 크고 작은 강하천이 흘러들어 영양염류 함량이 높은 것도 바다가양식에 유리한 조건의 하나 - 동해는 남북방향으로 길며 남북 사이의 수온 차가 크고 여름철에 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연중 잔잔하며 연안에서 미세기가 매우 약하고 난류와 한류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양식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해삼, 성게, 밥조개, 피조개, 함박조개, 전복 등을 양식할 수 있음 - 라선시 앞바다는 평균수심과 저질 조건이 밥조개 양식에 유리하고 두만강 하류 주변의 바다자리 호수는 굴 양식에 유리 -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에는 해삼, 성게가 많이 분포·서식하고 성게가 많아 얕은 바다에서는 해삼과 성게를, 수심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수역에서는 밥조개와 다시마, 미역을 혼합양식할 수 있음 - 함경남도는 해안선이 길고 수심이 서서히 깊어지는 자연지리적 특성을 고려, 다시마와 밥조개 등 시설물에 의한 양식에 유리 - 강원도의 통천군과 안변군 앞바다는 함박조개를 자연 발생과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양식할 수 있음
로동신문	1월 17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여러 성, 중앙기관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 ‘륙해운성’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항만시설의 능력과 짐배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그 운영을 적극화하며 육로를 통한 수송능력을 늘리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취급
로동신문	1월 19일	발전전망이 좋은 조선 서해에서의 바다가 양식업	- 수산연구원 원장 박사 심성보 기고 글 - 서해는 수질, 수심, 수온 등 바다 생태환경 조건이 바다 동식물의 생활에 적합. 전반적 수역의 물흐름이 좋고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 있어 바다가양식 조건이 아주 양호 - 서해안 부근은 복잡한 풀과 굽으로 되어있는데 풀이 놓여있는 방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향은 각이 함. 풀은 바다 밑의 주변보다 두드러지게 올라온 곳으로 다른 부분보다 썰물 때는 빨리 드러나고 밀물 때는 늦게 잠김. 풀은 굽과 굽 사이에 있어 굽으로 깊은 곳에서 사는 물고기들과 갑각류들이 회유하고 풀등에서는 얕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조개류가 서식 - 서해는 남쪽으로 완전히 열려있어 먼바다물이 거침없이 들어오고 대륙 깊이 후미져 들어가 있으며 큰 강들과 중소하천들이 많이 흘러들기 때문에 영양염류가 풍부해 여러 양식대상 종들의 성장에 유리 - 서해의 바닥질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북부는 일반적으로 연해에 모래감탕이 있고 그다음 감탕모래구역이 나타나다가 점차 깊은 수역으로 나가면서 모래구역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음. 바닥질의 이러한 분포는 밀층물고기들과 조개, 게, 새우류의 어장형성 기본요인이 됨. 실례로 모래바닥에는 대합, 감탕 또는 모래감탕구역에는 바스레기와 피조개, 감탕모래구역에는 개량조개가 분포·서식 - 서해에는 바스레기, 대합, 동조개, 개량조개, 가무레기, 키조개, 개조개, 굴, 맛, 토어, 피조개, 무른개비, 전복, 골뱅이, 소라, 오징어, 서해 문어 등이 분포·서식
로동신문	1월 21일	올해 첫 다시마 모내기 진입,련일 성과 확대-서해의 바다가양식 단위들에서	- 황해남도 ‘구미포수산사업소’,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 등에서 올해 첫 다시마 모내기에 일제히 진입
조선중앙통신	1월 22일	수산 부문에서 물질기술적 토대강화를 위한 사업 전개	- ‘평안남도수산물관리국’ 산하 수산사업소들은 고깃배와 어구들의 수리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확보하고 수리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한편 고깃배 수리 과제들을 일정계획에 따라 수행
로동신문	1월 24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1.22~23)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강윤석 부위원장이 법안 보고. 바다가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제14기 제12차회의 진행	양식장의 조성과 양식물의 생산, 처리에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다고 설명 -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가양식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
로동신문	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 해양수산 관련 부문 과제 발제 - 수산부문에서 어로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고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많은 수산물을 생산해야 함
로동신문	1월 26일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신포시바다가양식 사업소를 찾아서	- 김정은 위원장은 2024년 12월 28일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찾아 “전망성이 확고한 현대적 바다가양식사업소의 완공으로 지방경제발전의 새로운 영역이 또 하나 개척되었다고” 평가 - 김정은 위원장은 “바다를 낀 시, 군들이 바다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지방이 자기 조건에 맞게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는 시범창조사업을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내밀데 대한 특별지시”를 내림

북한 소식
2월

북한 해양·수산 기사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2월 3일	수많은 단위들 1월 인민경제계획 넘쳐 수행	- 수산부문 관련 내용 발췌 - 수산부문에서 전국적인 첫 달 수산물 생산계획 127%로 결속 -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 ‘구미포수산사업소’ 양식공들은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양식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증산의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송도원수산사업소’, ‘원산수산물생산가공사업소’에서도 계획보다 훨씬 많은 수산물을 생산”
내나라	2월 5일	바다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 당의 지방발전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오늘, 국가적 관심 속에 바다를 낀 시, 군에서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가기 위한 사업 활발히 전개 - ‘지방발전20X10비상설추진위원회’ 안에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을 전적으로 맡아보는 분과가 조직되며 바다를 낀 시, 군들에서 양식기지를 전개하는 사업을 관할하고 지도하는 체계가 세워졌음
조선중앙통신	2월 13일	북한의 서해지구 수산 단위들에서 겨울철 배수리 결속	- 서해지구 수산 단위에서 겨울철 배 수리를 앞당겨 결속 - 평안남도 ‘가마포수산사업소’, ‘한천수산사업소’, ‘문덕태향수산사업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선박의 성능과 면모 개선 - 평안북도 ‘운전수산사업소’, ‘철산수산사업소’에서는 자재와 부속을 확보하고 선진적 작업방법을 활용해 고깃배 수리정비 완료
로동신문	2월 15일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가 결정한 2025년 지방발전계획에 따라 함경남도 락원군에 현대적 대규모 바다가 양식기지 새로 건설 - 김정은 위원장 참석하에 2월 14일,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착공식 진행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의 자연경제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할 데 대한 당의 정책에 따라 오늘 신포시에 이어 두 번째로 되는 현대적 바다가양식기지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며 “이곳에 현대적 바다가양식사업소를 건설하는 것과 함께 해안지대특성이 살아나게 살림집까지 완벽하게 일떠세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구의 어촌마을을 락원군에 선물”하려 한다고 발언
로동신문	2월 21일	양식생산량을 해마다 2배 이상 끌어올리고 있는 갈마바다가 양식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 ‘갈마바다가양식사업소’는 해마다 양식물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고 있음 - 선진적 양식기술 도입해 섭조개와 참미역의 혼합 양식 과학화, ‘원산수산대학’과 연계 하에 선진적 수중감시 기구 도입, 바닷물 정제공정을 고도화한 해삼 배양장 건설 등을 통해 생산량 증대
로동신문	2월 22일	애도간석지 1구역 1차 물막이 공사 결속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는 1년 남짓한 기간에 수십 리에 달하는 애도간석지 1구역 1차 물막이 공사 성과적으로 결속
로동신문	2월 23일	바다에서 두벌농사 경험을 창조해간다-원산수산 물생산가공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 ‘원산수산물생산가공사업소’는 시험적으로 두벌농사를 도입해 1정보의 양식장에서 150t의 섭조개를 생산 - “두벌농사란 제한된 양식장에서 봄과 가을에 섭조개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

북한 소식
3월

북한 해양·수산 기사

보도 매체	보도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3월 1일	북한에서 바다가양식은 실리성과 전망성이 확증된 자원개발령역	-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해양연구소 소장 부교수 리일광 기고 글 - 당의 영도 하에 바다를 낀 지역들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의 전망이 열리고 있는 현실은 바다가양식을 자원개발의 새로운 영역으로 정하고 세계적 발전추세와 북한의 실정에 맞게 과학화, 현대화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 - 오늘날 해양경쟁은 주로 수산자원이나 영해권을 둘러싼 지난 세기의 경쟁과 달리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진행,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해양생태환경 보호가 그 대상. 특히 해양자원과 환경의 지속적 발전을 전제로 하는 현대 해양산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해양 생물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음 - 역사적인 <지방발전 20 X 10 정책>실현을 위한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는 오늘, 바다를 낀 시, 군들에서 바다가양식을 비롯한 해양생물 자원을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내민다면 지역발전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할 수 있음 - 실리성과 전망성이 확증된 자원개발 영역인 바다가양식을 더욱 발전시키자면 유리한 자연지리적 및 해양생태학적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바다가양식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보다 높이고 선진적 양식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우선 바다가양식의 계절적 제한성을 극복하며 사름울을 보다 높일 수 있게 실내배양을 배합하는 것이 중요

보도 매체	보도일자	제 목	내 용
			- 바다가양식에 의한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해양생태 환경을 유지하고 해양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서 중요한 것은 생태형 양식 방법을 도입하는 것
조선중앙 통신	3월 1일	황해남도의 수산물생산 단위들에서 다시마 양식장 면적 확장, 바다나물 수확 한창	- 올해에 들어 황해남도의 다시마 양식장 면적은 10여 정보 늘어났으며 지금 다시마 수확이 한창 -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는 양식장 면적이 늘어난 데 맞게 노동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다시마 모내기를 체절에 끝냄 - ‘웅진해안수산사업소’, ‘웅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는 과학연구 단위와의 연계 하에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혁신안을 받아들여 생산 확대의 담보 마련 - ‘황해남도수산물관리국’은 천연기념물인 ‘웅진참김’을 보호 증식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로동신문	3월 3일	전면적부흥발전을 위한 진군속도 더욱 가속화-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2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 수산부문 내용 발췌 - “수산성적 2월 수산물 생산계획 넘쳐 수행. ‘홍원수산사업소’, ‘신포수산사업소’, ‘리원수산사업소’, ‘김책수산사업소’에서 기망당 어획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계절적 조건에 맞는 집중어로전을 활발히 전개하여 물고기잡이에서 성과를 거둠 -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온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 ‘구미포수산사업소’, ‘송도원수산사업소’의 양식공들은 시기별, 공정별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계획보다 많은 양의 양식물을 생산
로동신문	3월 4일	배수리기일을 앞당긴 위훈창조의 10여일-청진수산 사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 ‘청진수산사업소’에서 배수리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 - 사업소는 계획한 1단계 배 수리 계획을 10여 일 동안 완수
로동신문	3월 6일	서해의 어장으로 고기배들 진출-평안북도, 황해남도의 수산단위들에서	- 서해지구의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수산 단위에서 올해 첫 출어 - 평안북도 ‘정주수산사업소’는 수십 척의 배 수리를 성과적으로 진행 - 황해남도 ‘해주수산사업소’,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는 어선 건조, 어구현대화 등에서 성과

보도 매체	보도일자	제 목	내 용
조선중앙통신	3월 11일	락원군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 추진	- ‘지방발전20X10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의 주도하에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추진
V O K (조선의 소리)	3월 12일	새년도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전구들에 필요한 건설장비들과 자재들을 전진공급	- 지방의 보다 폭넓고 급진적인 중흥을 목적으로 확대심화한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실행을 위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속에 필요한 건설장비들과 시멘트, 강재, 목재 등 자체보장 사업이 적극 추진 - 철도성, ‘륙해운성’에서는 현존토대와 잠재력을 효과 있게 이용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음
로동신문	3월 13일	봄철고기잡이 위한 첫 출어 성과적 보장 -평안남도의 수산사업소들에서	- 3월 12일, 평안남도의 수산사업소들 올해 첫 출어
조선중앙통신	3월 15일	남포수사사업소의 어로선단 출항	- 3월 14일, ‘남포수산사업소’에서 올해 첫 출어
로동신문	3월 16일	바다목장	-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해양연구소 연구사 교수 박사 최호정 기고 글 - 최근 다양한 양식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해양 수산업 발전에서 바다목장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의견 제시, 바다목장은 바다 수역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자연적인 바다 환경에서 바다 동식물을 번식시키고 이를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장소를 의미 - 바다목장은 크게 개방식과 울타리식으로 구분. 개방식바다목장은 넓은 수역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인공어초나 음양유인장치를 부설하여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바닥 살이 동물들이 서식하게 함으로써 바다 동식물들의 생물량을 늘이는 형태. 울타리식바다목장은 수백 정보 또는 그 이상 넓은 수역의 변두리에 물고기 이동을 막는 울타리 형태의 장치를 배치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양식시설물을 설치하여 각이한 종의 바다 동식물을 기를 수 있게 하는 형태 - 바다목장 건설에서는 적지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 양식물에 대한 관리를 조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보도 매체	보도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3월 20일	2024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위들에 공동순회 우승기 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2024년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한 다음의 공장, 기업소들에 공동순회우승기와 표창장을 수여 - 해양수산 관련 단위 발채 - ‘문덕수산사업소’, ‘한천수산사업소’, ‘가마포수산사업소’,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대’, ‘다사기계화대’, ‘청강기계화대’, ‘석화간석지건설대’, ‘송도원종합식료공장’, ‘흥남대성수산종합기업소’
로동신문	3월 2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남포조선소를 현지도 하시였다	- 3월 20일, 김정은 위원장 남포조선소 현지도 - 김정은 위원장은 “선박공업의 현대화를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반적인 선박건조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한 선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언급 - 또한, “선박공업 부문의 기구체계를 효율적으로 완비하고 정책적 및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선박공업 전반의 현대화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을 무엇보다 최우선시하여야 하며 전국가적이며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

북한 소식

NK 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2월 21일	DPRK arms shipments to Russia slow in early 2025 but Feb. sees renewed activity	- NK Pro가 Planet Labs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올 초부터 2월 20일까지 러시아 선박의 북한 나선향 정박은 4차례인 것으로 확인 - 북한 나선향을 통한 북한-러시아 간 무기거래 의심 사례는 2024년 같은 기간(1~2월) 10차례에 비해 감소 - 전체 운항횟수는 줄었지만 2월에만 3차례(1일, 9일, 20일) 운항이 이루어진 점에 주목 - 선박 외에도 철도 등으로 북한의 무기 공급 채널이 다각화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며, 러시아와 철교로 연결된 북한 두만강역에는 열차 운행 흔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방수포로 덮인 물체도 여러 개 발견
3월 3일	North Korean fishing vessels flock to Russian port with ties to New Zealand	- Marine Traffic, Global Fishing Watch의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초부터 최소 3척의 북한 어선이 러시아 나호드카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또 다른 협력 가능성을 시사 - 북한 나선향 소재 황진회사 소유의 진모봉5호(Jin Mo Bong 5/ IMO 7522435, 과거 Rok San 1)는 작년 3월 처음 나호드카항에 정박, 6월 귀항 후 거의 매달 운항. 가장 최근에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현지 회사인 Timber Terminal이 운영하는 부두에 정박 후 귀항 - 원산수산물수출회사가 소유하고 조선해양무역회사가 관리하는 냉동선 통명산호(Tong Myong San/ IMO 7122235)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Timber Terminal이 운영하는 부두에 정박. 위 선박은 1월 24일 남포항을 출항, 한반도를 돌아 북한 동해 항구에 정박 후 나호드카항에 도착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지난 1월 31일 북한 나선항을 출항한 려명해운의 물고기 운반선 진모 봉4호(Jin Mo Bong 4/ IMO 1070911)도 Timber Terminal이 운영하는 부두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 - 러시아 자료에 따르면 Timber Terminal은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나호드카 태생의 뉴질랜드 시민 Vyacheslav Meyn도 지역의 기업 및 사업가 등과 함께 창립에 참여. Meyn은 축구 애호가로 유명하며,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유나이티드 축구클럽(Christchurch United Football Club)을 운영하고 있음 - Timber Terminal은 주로 한국, 중국 항구 간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며, 연간 최대 30만 톤의 화물을 처리 - Timber Terminal과 Vyacheslav Meyn은 최근 북한 선박의 정박과 관련한 NK Pro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위성 사진으로는 북한 선박이 어떤 화물을 취급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북한의 선박 세 척은 어업 활동과 관련 있으며, 그중 한 척은 해외 해산물 판매에 관여하는 회사의 소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1은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3월 13일	Reported sinking of North Korean ship spotlights dangers of 'dark voyages'	- 연합뉴스는 대북 소식통의 정보를 인용, 석탄 밀수가 의심되는 북한 화물선이 지난 2월 말 충돌 사고로 침몰, 20여 명의 북한 선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짙은 안개로 시야가 가려진 상황이었으며, 북한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끈 상태로 운항. 이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연합뉴스는 사고 선박의 선명을 밝히지 않았고 중국 선박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언급했으며, 중국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로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이 해외 시장에 석탄, 철, 광물자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결의안 2397호에서는 연간 50만 배럴 이상의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 -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석탄 수출, 석유 수입 등 금지 품목을 비밀리에 운송할 때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끄는 경우는 드물지 않음